

2017

Report of Trend

2017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 **규제완화 정책** **동향보고**

2017. 06. part1 제 75 호

Contents

I . 정부 추진동향

- | | |
|---|----|
| 1.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는 지방분권 | 3 |
| 2. 기존 자치 · 지역발전위 통합...지방분권 컨트롤타워 구축 | 4 |
| 3. 김동연 "규제프리존 필요" ...대기업 특혜라는 당 · 청과 온도차 | 5 |
| 4. [J 노믹스 1 기] 제자리걸음 규제개혁...규제 네거티브 원칙 다시 세운다 | 6 |
| 5. 제 2 국무회의 , 지방분권 강화 물꼬 트나 | 7 |
| 6. 문재인 대통령 , 시 · 도지사 간담회...지방분권 · 균형발전 신호탄 될까 ? | 8 |
| 7. 정우택 "'알바 추경 '아닌 '규제프리존법' 처리부터 해야 " | 9 |
| 8. 靑 일자리 추경에 경제특별법으로 맞선 野 | 10 |

II . 수도권 추진동향

- | | |
|---|----|
| 1. 무역협회의 직언 " 새 정부 수도권 규제완화 나서라 " | 11 |
| 2. 김진표 " 첨단산업 , 외국 가게 둘 수 없다...수도권 규제완화 " | 12 |

III . 비수도권 (지역) 추진동향

- | | |
|--|----|
| 1. " 소멸위험 큰 낙후지방 , 차등 지원을 " 지역균형발전協 , 국회서 토론 | 13 |
| 2. ' 기준인건비 - 예비타당성 ' 지자체 자율성 침해 심각 | 14 |
| 3. 충북도 국토균형발전 · 지방분권 운동 '이끈다' | 15 |

1.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는 지방분권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6.04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중부매일

02

주요내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대통령 직인수위원회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새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지방분권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

-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은 물론, 제 2 국무회의 신설 등 상당한 지방분권 공약을 제시한 것에 대한 압박으로 풀이 됨
- 지난 1일 열린 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지방분권에 관한 의지를 확인하고 지방분권 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
 - 최문순 강원지사(회장)와 서병수 부산시장·윤장현 광주시장(이하 부회장) 등 회장단 참석
 - 국정기획자문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과 6개 분과의 분과위원장들도 참석
- 특히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분권 개헌 및 문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제 2 국무회의 신설을 비롯한 지방의 국정참여 확대, 지방재정 확충, 지방자치 제도 개선 등 핵심 지방분권 과제들까지 건의
-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정책 실현 방안을 구상해 줄 것과 중앙부처의 업무보고와 균형을 맞춰 시·도별 정책제안 사항 또한 별도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
- 김진표 위원장
 -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새정부의 정책방향이고, 새정부의 많은 과제들은 국정의 동반자로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야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음
- 도지사협의회가 제안한 지방분권 정책
 -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는 등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강화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강화를 위한 제 2 국무회의 신설의 신속한 추진
 - 지방재정 분권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증대와 지방교부세 법정율 인상, 불합리한 국고보조사업 개편 등 혁신적 지방세제를 개편해 지방의 재정자주성 제고
 -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 확대 등을 통한 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안 등

시사점

지방분권을 추진하는데 있어 재정분권 등 세재개편이 같이 진행되어야 지역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

출처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7494>

2. 기존 자치 · 지역발전위 통합...지방분권 컨트롤타워 구축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6.06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MK 매일경제

02

주요내용

새 정부가 기존 중앙 주도의 하향식 지역발전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분권 · 균형발전위원회'를 연내 설립

- 정부는 또 약 10 조원에 달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예산의 집행 권한을 지방분권 · 균형발전위원회에 할애해 사업 수행 능력을 강화할 방침
- 6 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새 정부는 지방혁신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 운영돼 왔던 기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가칭 '지방분권 · 균형발전위원회'를 오는 12 월까지 설립
- **국정기획위 관계자**
 - 현행 지역발전위원회 등이 부처 간 의견을 조율 ·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권한이 약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
 - 그간 지역정책은 사실상 지역민보다는 중앙 경제부처가 주도해 건설사업 중심의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조성에 집중한 점을 개선할 계획
 - 중복 · 비효율 지적을 받은 기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를 연내 통합해 지역분권과 균형 발전의 컨트롤타워로 세우고, 지역발전특별회계도 개편해 예산지원체계를 만들어 재정적인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힘을 실어줄 것
-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은 지방의 인구구조, 낙후도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편성될 전망**
 - 현행 지역발전특별회계가 개별 사업에 따라 산업부, 국토교통부 등으로 나뉘어 시행되는 데 반해 앞으로는 총괄지원부처를 행정자치부로 변경해 위원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원한다는 전략
 - 정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참여 플랫폼을 만들어 지역발전전략을 추구해 나간다는 계획
- 그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는 비슷한 성격으로 중복 · 비효율성의 문제와 더불어 재정적인 투명성도 부족했다는 지적
- 또 정치권이 소관 경제부처나 위원회를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는 창구로 활용하면서 지역민들 의중보다는 포퓰리즘의 도구로 활용됐다는 비판
 - 예컨대 올해 10 조원 수준의 지역발전특별회계 중 2 조원 이상이 지방 도로개선 및 건설사업
 -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연간 약 5 조원의 경제발전계정, 4 조 5000 억원 안팎의 생활기반계정 및 제주특별 자치도계정과 세종시특별자치시계정으로 나뉨
 - 계정 금액은 지역낙후도에 따라 일정 비율로 지차체에 우선권이 부여되지만 수년간 큰 변화 없이 관례적으로 공급되고 있음

시사점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이 아닌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이에 대한 정책 및 추진방식의 하나로 지방분권이 필요로 하는 논리구조 대응 필요

주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7730.html

3. 김동연“ 규제프리존 필요” ...대기업 특혜라는 당 · 청과 온도차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6.06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한겨레

02
주요내용

■ 경제부총리 후보의 경제정책 “투자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 과감한 규제완화를 1 순위 꼽아 문 대통령은 ‘프리존법’ 반대 입장

- 세금인상 · 일자리 · 복지확대 찬성, 법인세는 실효세율 인상 추진 뒤, 명목세율 인상은 신중히 검토 뜻
- 김동연 (60)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대기업 특혜가 아니다”라고 밝힘
 - 이 법을 ‘대기업 청부입법’으로 규정하고 후보 시절 반대 입장을 낸 문재인 대통령과 상충하는 대목
- 6 일 김 후보자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
 - 세금인상이나 일자리창출, 복지확대, 부동산규제 등 주요 과제에 대해 문 대통령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을 보였으나,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태도를 취했음
- 규제프리존법에 찬반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의 답변
 - 해당 법은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일부 규제특례에 대해 환경 · 안전 침해 등 우려가 제기되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 · 보완, 대안마련 등 협력
 - 법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미비점을 고쳐 도입해야 한다는 것
 - 규제프리존법상 규제 특례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며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라고 강조
 - 특히 주요 지역전략 산업인 신산업 분야는 벤처 · 스타트업 기업 투자가 활발한 분야로, 오히려 이들 기업의 투자 촉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힘
- 김 후보자는 규제 자체에 부정적 인식을 보임
 - 박근혜 정부 정책 중 이어가야 할 5 가지 경제정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과감한 규제개혁’을 1 순위로 꼽았음
 -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이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맞춤형 복지 강화는 후순위
 - 규제완화를 국정 핵심과제로 추진한 이명박 · 박근혜 정부 때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 차관, 국무조정 실장으로 일한 경험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김 후보자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
 - 비과세 · 감면 축소 등을 통한 실효세율 인상을 우선 추진하되 명목세율 인상은 신중히 검토
 -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공약에서 재벌대기업에 대한 과세정상화 원칙을 밝혔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원상 복귀 ($22\% \rightarrow 25\%$)는 재원 부족을 전제
 - 가계부채 및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완화 원상 복귀도 가계부채 추이 증가 등을 봐가며 신중히 결정

시사점

기존 ‘규제프로존법’의 일부 조정이 예상되나, 입법추진 목적인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개념과 목표는 유지 필요

속ч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7730.html#csidxaa6a4abdfddd243b7255c81e7c9c3ff

4. [J 노믹스 1 기] 제자리걸음 규제개혁...규제 네거티브 원칙 다시 세운다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6.11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연합뉴스

02

주요내용

이달 TF 구성…다음 달 개선 과제 발표, 서비스법 ·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 가능성도 고개

- 문재인 정부는 모든 규제를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법으로 금지할 것만 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 방식을 도입하고 경제 주체 자율 규제에 맡긴다는 방침
- 큰 정부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토록 규제개혁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일자리 때문
 - 규제 때문에 활발한 창업, 창직 (創職) 이 나타나지 못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지 못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고용 시장이 한층 더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
- 규제에 대해 J 노믹스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규제개혁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서비스법),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 전망도 한층 밝아진 것 아니냐는 전망
- 김동연 " 창업 · 창직 핵심은 규제 개편 "...일자리 위한 규제개혁 나설 듯
 -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을 이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정책 방향 중 하나로 혁신성장을 언급하며 이를 위해 규제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
 - 특히 현 정부 제 1 국정 과제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불합리한 규제 철폐가 필수라는 입장
- 정부 구호와 달리 체감 개혁이 미흡한 것은 정부 규제개혁이 뒤늦은 경우가 많기 때문
 - 세계경제포럼 (WEF) 이 해마다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 정부 규제에 따른 부담 ' 부문에서 한국은 2007년 8위까지 올랐으나 2009년 순위가 98위로 수직 하락해 2011년에는 117위까지 떨어짐
 -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정부 규제 부담이 다른 국가들보다 유달리 크다는 의미
- 서비스법 · 규제프리존 법도 국회 통과될까 ' 주목 '
 - 청와대와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전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반대해온 대표적인 규제개혁 관련 법안인 서비스법 , 규제프리존법을 둘러싸고도 다른 분위기가 감지
 - 김 부총리가 이들 법에 대해 "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 며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
 - 서비스산업 체계적 육성을 위한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서비스법 제정이 필요
 - 다만 보건의료 분야는 의료 공공성 훼손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 당장 이달 중 규제개선 TF 구성…국회 · 청와대와 소통이 관건
 - ' 문재인 정부 ' 표 규제개선 작업은 당장 김 부총리가 취임한 이달부터 본격화
 - 정부는 신산업에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 자율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쪽으로 가닥 잡았음
 - 이를 위해 이달 안으로 관계부처 네거티브 규제개선 태스크포스 (TF) 를 구성하고 다음 달 중으로 규제 대상을 발굴해 실제 개선까지 이끌겠다는 방침
 - 4 차 산업혁명에 따라 새롭게 나타난 신산업 성장을 정부가 더는 발목 잡지 않겠다는 의지 표현

시사점

규제 네거티브 원칙은 이미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해온 사항이나 규제완화 및 개혁을 이유로 수도권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온 바 , 규제완화에 있어 지역균형발전영향 등의 고려하기 위한 장치 마련 필요

속ч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10/0200000000AKR20170610017700002.HTML>

5. 제 2 국무회의 , 지방분권 강화 물꼬 트나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6.13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충청투데이

02

주요내용

제 2 국무회의 대통령 · 총리 · 광역단체장 참여, 중앙 – 지방 협력회의의 의, 안희정 지사 공약 내세우기도, '의결권 부여' 법적 근거 필요 ... 14 일 전초전 성격 간담회 실시

- 19 대 대선 당시 안희정 충남지사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제 2 국무회의' 가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화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방분권 강화의 새로운 물꼬를 틀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중앙 – 지방 협력회의 성격인 제 2 국무회의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와 전국 17 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국무회의
 - 광역단체에게는 지방분권에 관한 정책 심의나 의안 제출 권한이 부여
 - 이를 이유로 제 2 국무회의는 문 대통령이 강조해 온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다루는 최고 수준의 논의기구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뒤따르고 있음
- 다만 국무회의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심의 · 의결 기관이라는 점에서 제 2 국무회의의 실행을 위해선 헌법 개정이 필요
 -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적으로 오는 14 일 광역단체장과 함께 제 2 국무회의의 전초전 성격의 간담회를 실시한다는 복안을 내놓았음
 - 취임 후 공식석상에서 광역단체장들과 첫 조우를 갖는 문 대통령은 각 지역 건의사항과 지역 공약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임
 - 이 자리에서 대전시는 지역 대형 공약인 4 차 산업혁명 특별시와 관련한 지역 요구를 적극 전달할 것으로 예상
 - 충남의 경우 극심한 가뭄에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형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
- 이와 함께 문 정부 출범 이후 가시권에 들어온 지방분권 강화를 두고 지방재정 자주 성 확보 등에 대한 적극 반영을 요청할 것으로 분석
- 일각에서는 이번 간담회가 정부와 광역단체장 간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지역 공약 반영 창구 역할을 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부정적인 견해
 - 제 2 국무회의 추진을 위한 핵심인 의결권 부여에 있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협로가 관측되고 있기 때문
 - 국회에서는 제 2 국무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회의 명칭이나 위원 구성 등에 대한 이견으로 발목이 잡힌 상태
 - 결국 의결권이라는 새로운 권한 없이는 대통령 자문기구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
- 지역 정가 관계자
 -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의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시범 가동에만 그쳐선 안됨
 - 문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계획 수립에 있어 지역 의중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으려면 조속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할 것

시사점

제 2 국무회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에 있어 지방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

주제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66705>

6. 문재인 대통령, 시·도지사 간담회...지방분권·균형발전 신호탄 될까?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6.13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노컷뉴스

02

주요내용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4일 취임 후 처음으로 17개 시·도지사들과 제2 국무회의 성격의 간담회 개최

-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들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첫 만남을 가질 예정
 - 상견례를 겸한 이번 만남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정책과 관련해 지방 몫의 교부금이 일자리 창출에 쓰일 수 있도록 각 시·도에 협조를 구하는 일이 주된 논의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 청와대 관계자
 - 과거의 간담회가 대통령의 일방적 지침 하달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만남은 중앙과 지방의 협력과 협치에 의미를 둔 제2 국무회의의 전 단계
- 제2 국무회의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안희정 충남지사가 신설을 주장해 문 대통령이 이어받는 것으로, 정부는 제2 국무회의 신설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준비하고 있음
- 이번 간담회의 주된 주제가 일자리 정책이지만 시·도 지사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대선 공약으로 채택된 각 지역의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 건의와 함께, 지방분권에 대한 저마다의 소신도 쏟아낼 것으로 관측
- 이시종 충북지사
 - 중앙이 모든 법령과 규칙으로 자치단체를 관장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음
 -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과 함께 지방분권과 관련한 모든 법 개정이 필요

시사점

지역현안 사업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 및 인구쇠퇴지역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방안이 다각적으로 논의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필요

속보

<http://www.nocutnews.co.kr/news/4798790#csidx36661ad92ccbd4181311f3c4d02aeef7>

7. 정우택 "'알바 추경 '아닌' 규제프리존법' 처리부터 해야"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6.14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아시아경제

02
주요내용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3 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반대하며, 실업 극복과 민간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프리존법 처리를 주장

-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자유한국당의 협력을 구하려면 불과 수 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반대만 하던 행태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활성화법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
 - 청년일자리 비롯해 우리 사회의 일자리 문제가 국가의 최대 현안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박근혜 정부 때도 일자리 창출 때문에 4년 내내 서비스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특별법 등 경제활성화법을 줄기차게 추진했다"고 말함
 - "전임 정부 당시 수많은 일자리 창출 노력을 사사건건 막고 무작정 반대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었다"며 "민주당은 당시 도지사였던 이낙연 전남 도지사를 비롯해 야당 도지사까지 찬성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남의 일로 여기고 반대했다"고 지적
- 전임 정부 당시 수많은 일자리 창출 노력을 사사건건 막고 무작정 반대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
 - 민주당은 당시 도지사였던 이낙연 전남 도지사를 비롯해 야당 도지사까지 찬성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남의 일로 여기고 반대했다고 지적
- 사사건건 일자리 창출 법안을 막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과 정부가 이제 와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작정 국회에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
 - 이번 추경은 형식상 국가재정법상의 추경 편성 요건에 맞지 않고 내용면에서도 세금 폭탄을 퍼붓는 일회성 알바 예산 수준
 -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근본적으로 경제활성화, 기업 투자를 통해 민간 분야에서 일자리가 생겨나야 한다고 주장
 - 세금폭탄을 투하해 일회성 알바 수준의 일자리를 만들어선 오히려 미래 세대에 또 다른 재앙이 될 수 있음
 - 국회 차원의 신중한 논의나 사회적 합의 없이 대통령 시정연설 한 번으로 마무리 지으려는 것은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일 뿐이라고 강조

시사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등의 정책 추진에 있어 단순히 일자리의 양을 늘리기 위해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지역의 일자리를 통해 일자리의 양과 질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 필요

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61310491944808>

8. 靑 일자리 추경에 경제특별법으로 맞선 野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6.15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이데일리

02
주요내용

일자리 창출 문제를 두고 정부 · 여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충돌

- 정부는 지난 7 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 집권 이후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정책을 꼽았던 문재인정부의 추경안이 야당이 추진해온 법안과 함께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림
 -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서비스법) 과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프리존법) 통과가 우선이라는 입장
 - 두 법은 박근혜정부 시절부터 자유한국당이 입법을 추진했던 사안
- 靑 “추경으로 공공부터” vs 野 “규제풀어 민간부터”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 일 국회를 찾아 추경안 통과에 협조해달라며 야당을 설득
 - 이날 시정연설에서 “실업대란을 방지하면 국가 재난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 며 “손을 놓고 있다면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 라고 야당의 협조를 구함
 -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민간에도 영향을 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논리
 - 자유한국당은 민간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는 입장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진정으로 자유한국당의 협력을 구하려면 사사건건 일자리 창출 법안을 막았던 일을 사과하고, 규제프리존법 등 경제활성화법을 먼저 통과시켜야 함
 -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근본적으로 기업 투자를 통해 민간에서 일자리가 생겨나야 한다” 며 정부의 추경안은 1 회성 알바예산 “이라고 혹평
- 與, 일부 법안 조정해 추경안 통과시키나
 - 제 1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추경안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만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해결의 여지는 남아있음
- 지난달 19 일 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 각 지역의 전략산업 발전을 위해서 규제프리존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함
 - 독소조항을 제거하고라도 각 지방의 전략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면 우리 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 국회 인사청문회 전 서면답변서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역의 특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규제프리존법 도입에 다소 긍정적인 신호
-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그동안 제가 속한 당의 입장은 부정적이었지만 새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전략 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토론이 필요

시사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법안 처리에 있어 비수도권 등 지역 전략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 필요

속чи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11&newsid=01170966615962048&DCD=A00101&OutLnkChk=Y>

1. 무역협회의 직언 " 새 정부 수도권 규제완화 나서라 "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6.07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MK 매일경제

02

주요내용

무역협회는 7 일 수도권 규제완화와 4 차 산업혁명 특별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한 무역업계 정책제언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짜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

- 무협은 이날 '기업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역업계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수출 구조혁신, 보호무역주의 대응, 기업 경쟁력 제고, 4 차 산업혁명 촉진,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 5 대 전략을 제시
 - 특히 수출 · 통상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규제 완화, 기업 투자, 서비스 산업 활성화, 4 차 산업혁명 액션 플랜 등 종전 재계가 가려워하던 부분까지 고루 담아 눈길
- **무협 정책과제 전격 제안 왜 ?**
 - 무협이 정책제언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수출 등 경제 불씨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
 - 기업 발목을 잡고 있던 규제가 해소되면 한국이 공격적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음
-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출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처방**
 - 7 일 무협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0 년간 수출이 한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기여도 (수출 증감액 / 실질 GDP 증감액 x100) 는 62.8%, 결국 한국 경제를 떠받친 가장 큰 요인은 수출
 - 수출 기여도는 지난 2015 년 -2.6% 까지 떨어졌지만 지난해 바닥을 짚고 41.6% 까지 회복
 - 이 때문에 무협은 수출을 국정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정책제언에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리쇼어링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확대, 신산업 상품과 서비스를 마음껏 실험할 수 있는 샌드박스 (규제 프리존) 설정,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 구축 등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대거 포함
 - 국내 투자와 일자리 기반이 튼튼해지면 수출도 건강해질 것이라고 본 것
 - 기존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과감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문
- 해외 진출기업이 양질의 제조 · 연구개발 인력을 수혈받을 수 있도록 수도권 제조 시설 설립을 허용하고 자금 지원, 법인세 감면
- 대기업이 국내 복귀할 때도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주력 기업 복귀를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
- 4 차 산업혁명 특별법 제정 등 국가 차원에서 신산업 지원에 공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도 역설
- 법 제정을 통해 4 차 산업혁명 관련 범부처 담당 조직을 만들고 4 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이 특정장소 (샌드박스) 에서 규제 없이 상품과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제언

시사점

무역협회 등은 이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나, 이는 규제 완화와 국가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진행된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그 기간동안의 비수도권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전반적인 부정적 영향을 보인 것으로 판단 가능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no=381040&year=2017>

2. 김진표 "첨단산업, 외국 가게 둘 수 없다...수도권 규제완화"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6.15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NEWS1 뉴스

02

주요내용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 중' ·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과의 전화 인터뷰

- 산업 등에 대한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과 관련해 첨단산업 경우 외국으로 가게 내버려둘 수는 없느냐면서 "그런 것들은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게 해줘야 함
 - 수도권의 규제를 유지하면 (산업이)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님
 - 첨단산업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석박사급 엔지니어를 고용해야 경쟁력이 있으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방에는 안 오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럼 상해로 간다고 이야기함
-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때 공약인 고위공직자 5 대 인사 원칙과 관련
 - 병역면탈이라든가 부동산 투기, 그리고 세금 탈루는 철저히 가려내야 함
 - 다만 위장전입 · 논문 표절에 관해서는 "10년 지나서 다시 문제 삼아서 그것을 인사청문회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시각에서 그 부분을 현실에 맞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검토하고 있는 것
- 인사청문제도에 대해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검증은 공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언급
- 휴대전화 기본요금 폐지를 통한 통신비 인하, 자율형사립고 · 외국어고 · 일제고 사 폐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일반 공휴일도 대체휴일 지정 등 방침을 밝힘
 - 알뜰폰 업계의 고충도 살려가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통신비 부담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물색
- 일자리 추경에 관해 우리 정치가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모든 것을 다 보이콧을 하는 나쁜 관행이 있음
 - 청년들의 절박한 심정을 생각한다면 정치권에서도 막상 예산 심의를 시작하면 그렇게 연연할 수 없을 것

시사점

수도권 규제와 함께 지방의 투자여건 및 산업생태계를 개선해야만이 지방으로의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수도권 규제가 비수도권으로의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만 부각시키기에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

출처

<http://news1.kr/articles/?3021314>

1. " 소멸위험 큰 낙후지방 , 차등 지원을 " 지역균형발전協 , 국회서 토론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6.01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전북일보

02

주요내용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 왕영철 국회의원)는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6 월 1 일 국회에서 개최

-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2 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정비가 필요
- 특히 소멸위험도가 높고 낙후된 지역에 대해 정부의 차등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본부장**
 - "비수도권 지역은 가임여성이 적고 고령인구가 많아 소멸위험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며 "특히 지방의 '면'을 중심으로 인구소멸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40년에 전국 450개 면의 인구가 2000명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
 - 이어 "이런 지역들은 사업체수가 많지만 대부분 영세 소규모 기업이며 일자리가 적다"고 덧붙임
 -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저발전 지역'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발전지수에 따른 유형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
 - 지역발전 사례로 진천군과 음성군, 완주군 등에 조성된 혁신도시를 들
 - 혁신도시 1 단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난 2005년 7월 1일 이후 설립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 대기업 본사 이전 등 '혁신도시 시즌 2' 정책의 강력한 추진이 필요
- **토론자로 참여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연 연구위원**
 - 자치단체가 사업선택에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재정비해야 함
 - 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체계는 bottom-up 방식으로 전환
 - 또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교부세 법정분 인상 등을 강조
- **협의체 공동회장인 송하진 지사**
 - 이번 토론회가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 설정에 도움이 돼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람

시사점

낙후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및 특화 전략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경쟁력 강화가 동시에 추진 필요

출처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29671>

2. '기준인건비 - 예비타당성' 지자체 자율성 침해 심각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6.10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전라일보

02

주요내용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지방분권' 개선점은?> 기준인건비제도 – 총액 외 직종별 정원 조정 . . . 예비타당성조사 – 비현실적 사업 선정 기준

-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2 단계 문재인정부가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는 제도들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 현행 제도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가 지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 대표적인 것이 기준인건비 제도와 예비타당성 제도
- 9 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해 매년 기준인건비를 상정해 각 지자체에 통보
 - 기준인건비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하지만 총액 외에 일반직 · 소방직 · 공무직 · 기타직 등 직종별 정원을 조정토록하면서 지자체에 필요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없음
 - 또 이를 초과하면 패널티를 부여하면서 지자체의 자율성에 한계가 따르고 있음
- 지자체들은 각자의 형편과 필요에 따라 정원을 자율적 ·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
 - 직종별이 아닌 총액 기준 내에서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패널티 역시 총액 초과 시에만 부여
 - 이와 함께 낙후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공공시설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제약하는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개선 요구
 - 우선 대상 사업규모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주장
 - 현행 예타 대상은 총사업비 500 억원 이상, 국고지원 300 억원 이상 사업으로 규정
 - 지난 1999 년 제도 도입 이후 경제규모와 물가, 재정규모 등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대상사업 선정 기준은 그대로여서 현재의 경제규모와 부합하지 못한 측면이 큼
 - 또한 '비용 대비 편익'이라는 경제성에만 치중하면서 산업기반이 부족하고 인구가 적은 낙후지역은 대형사업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음
 - 실제 국토균형발전과 영 · 호남 학합 차원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무주 ~ 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도 지난 2010 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진척되지 않음
 - R&D 사업이나 정보화사업은 아예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항목이 없어 낙후지역의 예타 통과가 더욱 어려운 실정
 - 이에 도는 건설사업의 경우 낙후지역 배려를 위해 경제성 가중치는 낮추고 지역균형 발전 가중치 상향 (25~30% → 40%), R&D ·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도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신설, 예타 대상사업 총사업비 500 억원에서 1000 억원으로 상향 조정, 예타 총 소요기간 1년 이내 완료도록 지침 개정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
 - 한편 도는 이날 '지방분권 · 균형발전 TF' 첫 회의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논의하고, 타 지자체와 공동으로 정부에 개선을 요구

시사점

수요를 중심으로 공공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서비스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제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오히려 재정의 효율적 사용이 아닌 중앙으로의 권한 집중과 지역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 대응 필요

총체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14264>

3. 충북도 국토균형발전 · 지방분권 운동 ‘이끈다’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6.13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충청투데이

02

주요내용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를 설치하는 등 지방분권 운동을 선도

- 12 일 충북도에 따르면 날로 심화되는 정치 · 경제 · 행정의 수도권 집중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실현하고자 지난해 12 월 ‘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 지난 3~4 월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전국 최초로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를 설치
 - 센터는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사업과 도민참여 및 자치역량 강화사업, 다양한 민간교류 · 협력사업, 수도권 규제완화 등 국토균형발전 관련 정책 및 현안 대응사업 등을 추진
 - 특히 KTX 세종역 설치 반대 범도민대책위원회 사무국 업무도 동시에 수행해 사실상 KTX 세종역 설치 백지화도 이뤄 낸 바 있음
 - 또한, 새정부 출범 이전부터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등 타 단체와 공동으로 실질적인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지방분권개헌협약 (안)을 마련해 대선후보들과 협약을 이끌어 내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
- 6 월 중에는 전국 13 개 광역단위지방분권협의회와 기초단위자치분권협의회로 구성된 전국지방분권협의회를 충북에서 개최
 -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촉구함은 물론, 새 정부 지방분권 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해 정부정책에 반영토록 할 계획
- 서승우 도 기획관리실장
 - 하반기에도 센터가 도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등 국토균형발전 관련 정책 및 현안 대응 사업, 지방분권 및 자치역량 강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도민 역량결집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겠음

시사점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등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비롯한 유관 기관들과의 협력 체계 구성을 통해 보다 강력한 의견제시 방안 마련 필요

출처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66667>